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7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10월 13일 (음력 8월 22일) 금요일

충장로 '빛의 예술'

충장로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 충장로 3가와 옛 조흥은행 간 약 130m 가로에 조성된 '루미나리에(Luminarie·빛의 예술) 거리'가 충장로의 밤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은 '제3회 광주 충장로축제'를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루미나리에'를 점등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사회 총체적 분열 국민들은 불안하다

작통권 이어 PSI 놓고 保-革 與-野 대치

▶관련기사 2·3·4·6·7·10면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 국론이 결집되기 보다는 대북 제재, 포용정책 등을 놓고 오히려 분열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차분한 모습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체제의 재정립을 도모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략에 따른 대립과 엇박자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지 4일째 되는 12일, 사회 전반은 대북 포용정책 등을 놓고 찬·반 의견으로 요동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대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측은 '수구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보수단체는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단체에서는 '미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반미·반전 민중대회 예고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 분배와 성장 등 국내 이슈와는 달리 안보와 공동체의 진로가 걸린 대북 문제는 매우 격렬하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이 같은 국론 분열 상황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엇박자 행보로 보다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정부의 미숙한 대처는 북핵 사태를 더욱 혼미스럽게 만들고 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문제와 관련,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또 PSI 참여 문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맞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정부측 입장과 남북관계의 파탄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정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발표된 직후, 정치권은 초당적 대처를 강조했지만 나흘이 지난 12일 오후에야 우여곡절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북핵 문제는 오히려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적이고 평화적인 대안 제시 없이 우선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공세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주도의 조치. 2003년 5월 3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이다. 현재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오늘 韓-中 정상회담

북 핵실험 공동 대응 방안 등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실무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발표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노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첫 실무방문으로, 두 정상간의 회담은 2003년 7월 노 대통령의 방중과 지난해 11월 후 주석의 방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전용기편으로 베이징(北京)을 방문, 후 주석과의 단독,확대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실험 후속 대책과 동북아 지역 협력방안, 고구려사 역사를 비롯한 동북공정 문제, 경제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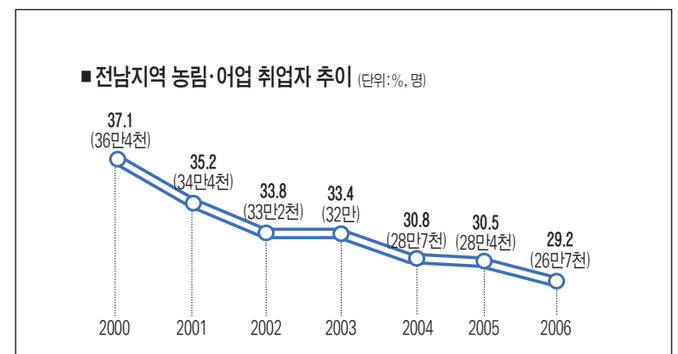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부터 45분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될 단독정상회담에서 특히 북한 핵실험 문제를 단일의제로 올려놓고 국제사회의 중대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문제와 대북 제재 방안 등 북핵사태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내 ▶9면

本社辭令

▲李濬熙 ㈜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CC 대표



전남 농·어민 비중 사상 첫 30%이하로

26만7,900명…6년새 9만6,100명 감소

올 들어 전남지역의 농·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사상 최초로 전체 산업의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어업 종사자의 이농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중 전남의 농·어업 취업자 수는 26만7천900명으로 지난해 평균 28만4천500명보다 6.2%(1만6천600명) 감소했다.

이는 6년 전인 지난 2000년 평균 36만4천명보다 무려 26.4%(9만6천100명) 줄어든 것으로 매년 1만6천여명이 농·어업 부문에서 이탈한 것을 나타낸다. 광주도 지난 8월말 현재 2만1천명이 농·어업 취업자로 분류돼 지난 2000년 3만명에서 6년새 30%(9천명) 줄었다.

특히 전남은 1~8월중 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어업 취업자의 비율이 29.2%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00년 37.1%보다 7.9%나 감소했다. 전남의 연중 평균 농·어업 취업자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저출산·고령화 기조와 함께 전남의 인구 감소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은 또 지난 2000년 대비 농·어업 종사자 수가 2001년 4.4%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7.0%, 2003년 11.3%, 2005년 20.3%, 2006년 1~8월 27% 등으로 감소 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농·어업 취업자 수는 193만5천명으로 지난 2000년 224만3천명보다 14%(30만8천명) 감소하는 등 해마다 5만여명이 농·어업에서 이탈하고 있다.

연도별 농·어업 종사자 수도 2001년 214만8천명, 2002년 206만9천명, 2003년 195만명, 2004년 182만5천명, 2005년 181만5천명 등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국물가정보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